AI 확산 일로…나주서 의심 신고 '초비상'

오리농장 산란율 14% '뚝'
간이검사는 '음성' 판정
전남도, 강진만 주변 10㎞ 303 농가 전수조사 실시

28일 오전 나주 오리농장에서 산란율이 급격히 낮아졌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나주는 국내 최대 닭·오리 사육지인데다 철새도래지인 영산강과도 인접해 있어 양성으로 확정될 경우 확산세를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다행히 간이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판정됐으나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시료를 채취해 시험실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해남, 무안에 이어 AI에 걸린 고니 사체가 발견된 강진만 주변 10㎞ 이내 오리농가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나주 공산면의 한 종오리농장에서 "오리 산란율이 14%로 떨어지는 등 AI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됐다.

이 농장에 사육 중인 종오리 2만5000마리는 일일평균 9200~9300개를 산란해오다 최근 7900개만 산란하는 등 AI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 현장 간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으나 시료 검사 결과까지는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전남도는 전했다. 전남도는 시료검사에서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와 관계없이 해당 농가의 오리를 살처분할 예정이다.

계열화 농장인 이곳은 철새가 드나드는 영산강과 2.5㎞가량 떨어져 있으며, 반경 500m 이내에 가금류 사육농가가 없다.

나주지역은 현재 사조화인코리아와 나주축협 등 육가공 계열회사로부터 병아리를 입식 받은 59개 농가에서 오리 89만3000마리를 비롯, 50개 농가에서 닭 336만6000마리 등 닭·오리 425만9000마리를 사육 중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역 내 437개(692만여마리) 오리 농가 가운데 312곳에서 분변, 환경 시료 등 검사로 AI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닭은 감염되면 증상이 곧바로 나타나지만, 내성이 강한 오리는 증상 없이 바이러스가 잠복할 수 있어 검사 대상은 오리에 집중됐다. 가장 최근 AI가 발생한 강진만에서 반경 10㎞ 안에 있는 10 농가와 철새도래지 인근, 최근 5년간 두 번 이상 AI 발생 지역, 오리류 밀집 사육 지역 등 중점 방역관리지구에 포함된 303 농가가 검사 대상이다. 1 농가는 중복됐으며 이 가운데 35개는 거위, 26개는 기러기 사육 농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닭·오리 안심하고 드세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잇따른 발생으로 닭, 오리고기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신안동 오리고기 거리'의 한 식당에서 점심으로 오리탕을 먹고 있다. 북구는 다음달 2일까지 각 부서별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닭 오리고기 소비촉진운동을 벌인다. /최현배기자 choi@

오늘의 날씨

해뜸 07:21 해짐 17:21 달뜸 06:42 달짐 17:29

일교차 커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세요

◇ 지역별 날씨 (℃)

광 주	맑은 뒤 흐림	0/11	보 성	맑은 뒤 흐림	-1/11
목 포	맑은 뒤 흐림	2/11	순 천	맑은 뒤 흐림	2/12
여 수	맑은 뒤 흐림	4/11	영 광	맑은 뒤 흐림	0/12
나 주	맑은 뒤 흐림	-2/12	진 도	맑은 뒤 흐림	3/12
완 도	맑은 뒤 흐림	4/12	전 주	맑은 뒤 흐림	-1/10
구 례	맑은 뒤 흐림	-1/11	군 산	맑은 뒤 흐림	-1/10
강 진	맑은 뒤 흐림	2/12	남 원	맑은 뒤 흐림	-3/10
해 남	맑은 뒤 흐림	0/12	흑산도	맑은 뒤 흐림	6/11
장 성	맑은 뒤 흐림	-2/11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	북~북동	0.5~1.0
	먼바다	북서~북	1.0~2.0	북~북동	0.5~1.5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동~동	0.5~1.5
	먼바다(동)	북~북동	1.5~2.5	북동~동	1.0~2.0
	먼바다(서)	북~북동	1.5~2.5	북~북동	1.0~2.5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7:04	01:42
	19:38	14:22
여수	02:28	09:06
	15:08	21:00

◇ 생활지수

뇌졸중	높음
감기	매우높음
자외선	낮음

◇ 주간 날씨

30(수)	11/1(목)	2(금)	3(토)	4(일)	5(월)	6(화)
4/10	5/11	0/10	1/13	3/13	5/11	1/7

여수서 또…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

기온변화에 출몰…올 7번째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7.4Km 해상 정치망 어장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 등에 우연히 다른 어종과 함께 걸리는 '혼획(混獲)'으로 잡혔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6일 낮 12시 50분께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7.4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J호(22톤) 정치망 어장 안에 밍크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선장 김모(63)씨가 발견, 돌산해경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길이 4.42m, 둘레 2.1m, 무게 1t가량의 이 고래는 작살류 등 불법 포획 흔적이 없어 처음 발견한 김씨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하고 인계했다. J호 선장 김씨는 이 고래를 경북 포항 수협에서 시가 3100만원에 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동해에서 자주 발견되는 고래가 기온변화 때문에 먹이를 찾아 남해에서도 자주 출몰하면서 정치망 그물 등에 걸려 혼획되는 사례가 올해 7건이나 발생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연합뉴스

'뇌물수수' 징역형 광산구의원 사직

내년 4월 보궐선거 여부 다음달 9일 결정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광주 광산구의회 차모 의원이 활동 중단 1년여 만에 사직했다.

광산구의회는 28일 열린 제223회 2차 본회의에서 차 의원의 사퇴안건을 의결했다.

차 의원은 광산구 의장 재임 시절(2004~2006년) "구청에 취직시켜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고, 이어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다. 차 의원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차 의원은 뇌물과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한 뒤 지난해 말부터 조사에 불응하고 잠적했다가 지난 2월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의회에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고 3개월간 세비 900여만원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광산구의회는 구속 수사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확정판결 전이라도 세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광산구의회는 형이 확정되는 대로 차 의원의 의원직 상실 및 보궐선거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차 의원이 최근 스스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시행 여부는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다음 달 9일 결정하게 되지만 선거를 치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잔여 임기가 1년여에 불과하고 4억~5억원대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최승렬기자 srchoi@

얽히고 설킨 전통시장 공중전선 정비

광주시, 산수시장 등 16곳 사업 연말 마무리

연말이면 광주 주요 전통시장 주변에 이리저리 엉켜있던 불량 공중선(線)이 사라질 전망이다.

광주시는 동구 산수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16곳에 대한 공중선 정비사업이 올 연말 마무리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 착공한 이 사업으로 산수시장과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주변을 마무리했으며 나머지 14곳도 연내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말 서구 양동시장 화재 현장을 찾은 윤장현 시장이 재래시장 주변의 공중선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추진됐다. 이번에 정비한 공중선 등은 케이블 12만219m, 전주 1898주, 통신주 1927주 등이다.

도심의 흉물이자 화재위험이 큰 불량 공중선을 하나로 묶고 늘어진 전선은 팽팽하게 당기거나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광주시는 공중선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말 주민, 지자체, 사업자와 함께 지역별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구성했다.

정비협의회는 공사용 차량 진입로 확보, 작업자의 옥내 진입을 돕는 등 사업 조력자 역할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한전과 통신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뒀다"며 "조만간 한전, 통신사 등과 합동으로 정비구역 실태조사와 정비협의회를 열어 사업대상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법 "헬기장 근처 토지 사용제한, 국가가 배상"

경찰 헬기 이착륙으로 인해 근처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토지 소유자의 사용권이 상공에도 미치므로 국가가 그 상공을 항로로 사용한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8일 대전 서구 정림동 주민 홍모(56)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비행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토지 소유자는 헬기 이착륙 항로로 사용되는 상공 부분에 대해 정당한 이익이 있다"며 "토지 소유권은 그 상공 부분에 미친다 할 것이고, 헬기 이착륙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